논문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아카이브의 이용*

1970년대를 중심으로

Utilization of Archives in Research on Modern Korean History

: Centered on the 1970s

곽건홍(Kwak, kun-hong)**

1. 머리말
2. 연구주제와 기록 분류
3. 인용 기록 분석
   1) 기록 유형별 분석
   2) 주제별 분석
   3) 기록 이용의 특징
4. 맺음말 : 한국현대사 연구를 위한 아카이브의 역할

* 이 논문은 2017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사학전공 부교수. 주요 논저 :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역사비평사, 2003;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선인, 2014; 『동아시아의 아카이브 비교 연구』 선인, 2016.

■ 투고일 : 2018년 1월 14일 ■ 최초심사일 : 2018년 1월 15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1월 20일.

〈초록〉

이 글은 아카이브 이용에 대한 조사를 위해 1970년대 한국현대사 연구에 인용된 기록을 분석하였다. 인용된 기록을 유형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인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체 기록 가운데 아카이브 이용은 미흡하였으며, 기록 인용 방법도 제각각이었다. 향후 아카이브에서 한국현대사 연구와 관련된 기록의 이용 분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아카이브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 평가·선별, 기록 수집, 기록 재조직 방향 등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물론 한국현대사 연구에 필요한 기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기록, 한국현대사, 아카이브, 인용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cited archives in the research on modern Korean history in the 1970s. The research contains the condition of the citation and the categorization of cited archives by types and topics. The utilization of the archives was insufficient among the entire records, and the citation method was inconsistent. An analysis of archives utilization related to research on modern history should be systematic. The archives should build a database according to archival appraisal and selection, records collection, and archives recollection. Providing the records for the research on modern Korean history is also necessary.

Keywords : Archives, citation, modern Korean history, records

1. 머리말

역사 연구는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진다. 특히 현대사 연구는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역사 연구자가 아카이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국가 아카이브는 통계를 작성할 때 연구자들의 기록 이용 현황을 분석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도별 업무계획은 기록 열람 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수치만 제시한다.[1] 좀 더 구체적인 자료인 국가 아카이브의 「월별 업무계획」도 이와 같은 통계는 생산하지 않는다. 곧 행형 · 재산 · 신분관련 기록 이용 실적을 중심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을 뿐이다.[2] 아카이브에 근무하는 아키비스트는 특히 역사 연구자에게 기록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록을 선별 · 보존한다(이상민 2002, 252). 그러나 국가 아카이브는 이러한 본연의 업무를 통해 현대사 연구자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아카이브가 현대사 연구에 기록을 제공하지 못하고, 현대사 연구자 또한 아카이브 기록을 이용하지 않는 현상은 매우 오래된 일이다. 종래 역사 연구에 필요한 기록을 수집하는 일은 오로지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렇게 된 원인은 첫째, 현대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 기록의 부재와 결락 때문이다. 국가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은 정부 기능 가운데 일부 기능에서 생산된 기록만을 보존하고 있다. 기록은 양적으로 매우 빈약하며, 몇몇 기록 유형에 편중되어 있다. 곧 정부가 남긴 기록으로는 정책결정 과정을 알 수 없으며, 그나마 남아 있는 기록도 파편적으로 존재한다(곽건홍 2014, 173-183). 그 이유는 행정 편의적 기록 처분 제도의 운영, 정부 기록의 관리 소홀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 아카이브의 기록 서비스 전략 부재 등에 기인한다. 기록 서비

1) 2015년 말 현재 국가 아카이브의 기록 열람 실적은 약 61만 7천 건에 이른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실적은 1,066만 명이다(국가기록원 2016).

2) 2017년 1~5월까지의 기록 열람서비스 제공 통계에 따르면, 총 379,274건 가운데 판결문 등 '행형관계' 약 35%(134,530건), 지적기록 등 '재산관계' 약 35%(134,090건), 인사기록 등 '신분관계' 16%(59,660건), 시청각기록 등 '홍보 · 행사' 기록 1.2%(4,513건), 관보 등 '기타' 12.8%(46,481건) 등이다(국가기록원 2017a).

스는 기록철 · 건 목록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록 기술 등 아카이브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아울러 연구자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 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국가 아카이브 소장 기록의 비공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도 그 원인이 있다. 2016년 3월 현재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은 795,837 건에 달했다.[3)]

이 글의 연구 목적은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이 어떤 기록을 주로 이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카이브가 기록의 평가 · 수집 · 기술 ·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아키비스트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다. 곧 아키비스트는 "이용자 연구(user study)를 통해 어떤 역사가들이 어떤 기록을 주로 이용하는지 연구함은 물론 연구의 어느 시점에 왜, 어떻게, 어디서, 그런 기록을 찾는지 조사해야 한다(이상민 2002, 256)."

기록학 분야에서 한국현대사 연구에 어떤 기록들이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1970년대 한국현대사 연구에 인용된 기록 조사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이용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1970년대 한국현대사 연구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는 민주와 독재, 탄압과 저항의 시대였으며, 산업화의 시대이기도 했다. 종래 분단 · 전쟁 등 정치 중심의 키워드로 설명되던 한국현대사 연구는 이 시기에 이르면 경제로 그 중심 주제를 전환하고 있다(황병주 2014, 89). 또한 주체의 측면에서도 엘리트 · 민중으로부터 소수자 등 다양한 주체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오제연 2016, 94).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 시기에 주목하였다.

둘째,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현대사 연구의 중심이 박정희 정권기로 이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법령상 비밀 · 비공개(제1호) 28건, 국방 등 국익 침해(제2호) 4,436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제3호) 10,416건, 재판 관련 정보 등(제4호) 18,648건, 개인 사생활 침해(제6호) 762,309건 등이다(국가기록원 2017b).

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용욱 2007, 191). 또한『역사비평』·『역사문제연구』·『역사와현실』·『역사연구』 등의 주요 학술지들이 유신체제를 특집 주제로 선정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황병주 2014, 95). 기록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미국 NARA 소장 기록과 정부 외교기록의 공개 등이 이루어지면서 연구를 추동한 측면이 존재한다(허종 2008, 183). 아울러 박정희 정권과 근대화에 대한 평가 문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오제연 2016, 102).

셋째, 근대화 담론과 일상사에 대한 관심이 기록의 이용 범위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곧 "담론 매체라 할 수 있는『사상계』"는 물론이고, "『창작과비평』과『문학과지성』 같은 1970년대 매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오제연, 2016, 102). 또한 일상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구술기록의 이용이 확대되었으며, 회고록·증언 등 에고 도큐먼트(ego-document)[4]의 활용도 늘었다(정용욱 2007, 193).

이 글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한국사연구휘보』(149호~177호)에 수록된 연구 가운데 한글로 작성된 학술지 게재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연구 시기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 89편의 논문을 선별했다. 각 논문의 각주 인용 실태와 본문의 〈표〉·〈그림〉 등의 출처를 조사해서 기록 인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연구 가치'에 중점을 둔 기록학 평가 방법론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기록 수집 전략, 보존기록의 재조직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주제와 기록 분류

이 글에서 선정한 총 89편의 학술지별 분포 양상은 〈표 1〉과 같다. 1970

4) 에고 도큐먼트는 자기 증언기록으로 일기, 자서전, 회고록 등의 기록을 일컫는다.

년대 연구 성과가 가장 많이 실린 학술지는 『역사문제연구』로 전체의 22.5%(20편)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역사비평』 10.1%(9편), 『사회와 역사』 9%(8편), 『역사와현실』 7.9%(7편), 『지역과 역사』 7.9%(7편) 순이었다. 1편 이상 연구 성과가 있는 학술지는 21개에 달했다.

1970년대 한국현대사 연구주제를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논문 편수가 가장 많은 주제는 [경제] 분야로 20.2%(18편)를 차지했다. 경제 분야는 다시 경제정책 · 농업 · 자본 · 공업 ·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정책]은 1970년대 전반 경제위기를 비롯해서 사채 동결을 통해 부실기업을 회생시키려 한 8 · 3조치, 주택정책, 소비억제정책 등을 다루고 있다(이정은 2010; 이종현 2012; 박태균 2013; 김아람 2013; 이상록 2013). [농업]은 농촌근대화 문제와 농민생활, 화전민 실태 등(신민정 2011; 김영미 2012; 정태헌 2014; 허은 2015a; 차철욱 2016), [공업]은 중화학공업화와 공업교육, 석유화학공업계획 등을 연구하였다(박영구 2010; 박영구 2011; 박영구 2015). [자본]은 외자유치,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내자 동원 등을 다루고 있다(김양화 2011; 장미현 2013; 이정은 2014; 이정은 2015). [기업]은 국가 · 기업 관계를 검토한 논문 1편이 존재한다(박길성, 김경필 2010).

〈표 1〉 학술지별 분포 양상

학술지명	연구단체명	논문 편수
경제사학	경제사학회	3
구술사연구	한국구술사학회	2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
사림	수선사학회	2
사총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3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3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8
숭실사학	숭실사학회	1
아세아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4
역사문제연구	역사문제연구소	20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9

역사연구	역사학연구소	4
역사와현실	한국역사연구회	7
역사학연구	호남사학회	1
지방사와 지방문화	역사문화학회	1
지역과 역사	부경역사연구소	7
청람사학	청람사학회	1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5
한국민족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4
한국사학보	고려사학회	4
합계		89

경제 분야 다음으로 많은 연구 성과는 [노동] 분야로 18.0%(16편)를 차지했다(김경일 2010; 류제철 2010; 임송자 2010a; 신병현 2011; 김무용 2011; 유경순 2011; 박영구 2012; 김명배 2012; 유경순 2013; 윤용선 2014; 정종현 2014; 허은 2014; 홍석률 2015; 임광순 2016; 장미현 2016; 김태호2016). 노동통제 전략을 비롯해서 단위 노동조합인 청계피복노동조합 노동운동, 노동력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공장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새마을운동 지도자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14.6%(13편)를 차지했다(임송자 2010b; 박진우 2010; 한도현 2010; 황병주 2011; 김보현 2011; 윤충로 2011; 최인이 2011; 이환병 2013; 오유석 2014; 왕연 2014; 이창섭 2015; 이창섭 2016; 김영미 2016).

[담론]은 민주주의·민족문화·자유주의·안보국가 담론 등을 다루고 있으며, 약 11.2%(10편)를 점하였다(이상록 2010; 허은 2010; 이하나 2012; 황병주 2012; 이하나 2013; 황병주 2013; 송은영 2013; 이하나 2014; 홍석률 2014; 이상록 2016).

[민주화운동]은 부마항쟁을 비롯해서 학생·종교·언론 운동 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7.9%(7편)의 비율이다(오제연 2012; 이창언 2012; 차성환 2012; 홍석률 2014; 김행섭 2015; 김선미 2016; 고지수 2017).

[지역]은 원주지역을 사례로 한 논문이 대부분이며, 7.9%(7편)를 차지했다. 소비조합 · 신협운동 등을 다루고 있다(김소남 2011a; 김소남 2011b; 김소남 2012; 전강수 2012; 김소남 2014; 김소남 2015; 방성찬; 이승일 2017). 다만, 특정 연구자 ·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표 2〉 연구주제 분류

주제 분류		주제어
1차 분류	2차 분류	
정치(1)		·김대중 납치사건
경제(18)	경제정책(5)	·8·3조치/ 주택정책/ 소비억제정책 ·경제위기
	공업(3)	·중화학공업/ 공업교육 ·안정공업기지/ 석유화학공업
	농업(5)	·농촌근대화/ 대만 농정 인식 ·농민생활/ 농촌지역 안보/ 화전정리
	자본(4)	·외자유치/ 전경련/ 자본축적
	기업(1)	·국가-기업관계
사회(4)		·장애인/ 주민등록제도 ·베트남난민/ 비전향장기수
문화(3)		·코카콜라/ 문화재정책/ 영화검열
국제(6)	남북관계(2)	·남북관계 구상/ 7·4남북공동성명
	대외관계(4)	·한미관계/ 대중국·소련 외교정책 ·북한·미국의 유신체제 인식 ·베트남공관원 억류 사건
교육(3)		·평준화정책/ 학교/ 현대사 학습
과학(1)		·과학기술정책
지역(7)		·원주·재해대책사업위원회/ 신협운동 ·강남개발
노동(16)		·노동통제/ 여성노동자/ 기능공 ·파업/ 청계피복노동조합/ 동일방직 사건 ·전태일/ 파독 광부·간호사/ 노동자문화 ·노동자 정체성
담론(10)		·민주주의 담론/ 감성규율/ 민족문화 담론 ·불평등·자유주의/ 안보국가 담론 ·분단문제 인식

민주화운동(7)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세력/ 부마항쟁 ·기독교 반유신운동/ 언론운동
새마을운동(13)		·공장새마을운동/ 농촌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연수원 ·모범농민/ 새마을운동 지도자

* 괄호 안은 논문 편수임.

[국제]는 [남북관계]·[대외관계]로 분류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 유신체제와 한미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논문은 6편으로 6.7%를 차지했다(신종대 2012; 김연철 2012; 김지형 2013; 홍석률 2013; 기광서 2015; 김원 2015). [사회]는 장애인, 주민등록제도, 비전향 장기수 등을 연구하였으며, 4.5%(4편)를 점하였다(김귀옥 2011; 홍성태 2012; 주윤정 2013; 노영순 2014). [문화]는 콜라전쟁, 문화재정책, 영화검열 문제 등을 다루고 3.4%(3편)(박유희 2012; 이은희 2015; 전덕재 2015), [교육]은 평준화정책 등을 연구하였으며, 3.4%(3편)를 차지했다(정무용 2013; 허은 2015b; 김수아 2015). [과학]은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한 1편뿐이며 비율은 1.1%이다(김근배 2017). [정치]도 김대중 납치사건을 다룬 연구 1편이다(홍석률 2012).

요컨대 1970년대 한국현대사 연구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따라서 제3장에서 경제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1970년대 한국현대사 연구에 인용된 기록을 분류하면 〈표 3〉과 같다. 먼저 아카이브(archives)에 해당하는 기록은 정부기록·대통령기록·국회기록·법원기록 등이다. 다음으로 운동 주체 측의 기록인 선언서·성명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일기·수기·자서전 등의 에고 도큐먼트, 외국 정부가 생산한 외국 기록, 기업기록, 각종 단체에서 생산된 단체기록, 구술기록, 마을기록 등으로 구분하였다. 공동체 기록의 성격을 띤 마을기록은 별도로 분류하였다.

5) 노동·새마을운동 주제를 경제 분야에 포함시키면 전체 논문 가운데 64%에 이른다.

〈표 3〉 인용 기록의 분류

기록 유형	세부 기록 유형
정부기록	정부간행물
	중앙기록
	외교기록
	법률기록
	지방기록
	공공기관 기록
대통령기록	
국회기록	
법원기록	
선언서·성명서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마을 기록	
에고 도큐먼트	일기
	수기
	자서전·회고록
구술 기록	
외국 기록	
기업 기록	
단체 기록	
신문	
연속 간행물	
조직·단체사	
소설	

또한 중앙지 · 지방지 · 대학신문 등의 신문기록, 잡지 등 연속 간행물, 조직 · 단체 역사를 정리한 조직 · 단체사로 구분하였다. 문학작품 가운데에는 소설이 인용되었음으로 소설도 분류하였다.[6]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기록 인용 횟수를 조사한 결과 총 89편의 논문에 다양한 유형의 기록이 5,176회 인용되었다.

6) 정부기관과 사회 각 단체에서 생산한 백서는 각각 정부간행물과 단체기록으로 분류했으며, 대통령 연설문집은 대통령기록에 포함했다. 『고대문화』·『연세춘추』 등 대학간행물은 대학신문으로 분류했다.

3. 인용 기록 분석

1) 기록 유형별 분석

〈표 4〉 기록 유형별 인용 횟수

기록 유형		인용횟수	비율(%)
정부기록	정부간행물	431	8.34
	중앙기록	129	2.50
	외교기록	88	1.70
	법률기록	19	0.37
	지방기록	85	1.65
	공공기관 기록	3	0.06
	소계	**755**	**14.62**
대통령기록		189	3.66
국회기록		62	1.20
법원기록		5	0.10
마을 기록		37	0.72
선언서·성명서		20	0.40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2	0.04
에고 도큐먼트	일기	123	2.38
	수기	120	2.32
	자서전·회고록	48	0.93
	소계	**291**	**5.63**
구술 기록		610	11.81
외국 기록		145	2.81
기업 기록		66	1.28
단체 기록		734	14.21
신문	중앙지	1,310	25.35
	지방지	5	0.10
	대학신문	55	1.07
	로동신문	11	0.21
	소계	**1,381**	**26.73**
연속간행물		524	10.14
조직·단체사		319	6.18
소설		24	0.47
합계		**5,167**	**100.00**

기록 유형별 인용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기록 유형별 인용 횟수가 높은 비율은 신문기록 26.73%, 정부기록 14.62%, 단체 기록 14.21%, 구술기록 11.81%, 연속간행물 10.14%, 조직 · 단체사 6.18%, 에고 도큐먼트 5.63%, 대통령기록 3.66%, 외국기록 2.81% 순이었다. 신문과 잡지류 연속간행물을 합한 인용 비율은 36.87%에 달한다.

신문기록은 중앙지 25.35%, 지방지 0.10%, 대학신문 1.07% 등이었으며, 중앙지는 대부분 『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 등을 인용했다.

〈표 5〉 신문기록 인용 횟수별 논문 분포

인용횟수	해당 논문수	인용횟수	해당 논문수
1~5회	18	31~40회	2
6~10회	15	41~50회	5
11~20회	11	51회 초과	9
21~30회	3	합계	63

신문기록은 89편의 논문 가운데 63편(70.8%)이 1회 이상 인용하였다. 30회 이상 인용하여 신문기록을 주요 자료로 활용한 논문 비율도 25.4%였다.

〈표 6〉 연속간행물 인용 횟수별 논문 분포

인용횟수	해당 논문수	인용횟수	해당 논문수
1~5회	30	31~40회	5
6~10회	4	41~50회	1
11~20회	5	51회 초과	3
21~30회	–	합계	48

연속간행물은 89편 논문 가운데 48편(53.9%)이 1회 이상 인용하였다. 연속간행물의 경우는 1~5회 인용 비율이 62.5%에 이른다.

〈표 7〉 아카이브(archives) 인용 횟수별 논문 분포

인용횟수	해당 논문수	인용횟수	해당 논문수
1~5회	24	31~40회	4
6~10회	11	41~50회	2
11~20회	8	51회 초과	6
21~30회	7	합계	62

정부기록은 전체 기록 가운데 정부간행물 8.34%, 중앙행정기관 생산 기록 2.50%, 외교부 생산 외교기록 1.70%를 차지했다(〈표 4〉). 정부간행물 인용 비율은 전체 정부기록 가운데 57.08%로 매우 높다. 아카이브 성격의 기록, 곧 정부기록 · 대통령기록 · 국회기록 · 법원기록은 전체 인용 건수 가운데 19.58%를 차지했다.

89편의 논문 가운데 62편(69.7%)이 1회 이상의 아카이브 성격의 기록을 인용했다(〈표 7〉). 아카이브 인용 횟수별 논문 분포를 보면, 5회 이하로 인용한 논문이 전체 62편 가운데 24편으로 38.7%를 차지했으며, 6~10회 인용한 논문 11편을 합치면 56.5%에 이른다. 아카이브를 중요 자료로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한 경우로 볼 수 있는 31회 이상 인용한 논문은 12편으로 19.4%에 지나지 않았다.

〈표 8〉 구술기록 인용 횟수별 논문 분포

인용횟수	**해당 논문수**	**인용횟수**	**해당 논문수**
1~5회	19	31~40회	3
6~10회	6	41~50회	1
11~20회	7	51회 초과	2
21~30회	3	합계	41

한국현대사에서 거시사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다양한 기록 이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기록 유형으로 구술기록 · 에고 도큐먼트를 들 수 있다. 구술기록 인용 횟수별 논문 분포를 살펴보면(〈표 8〉)

89편의 논문 가운데 41편, 곧 46.1%가 구술기록을 1회 이상 인용했다. 곧 구술기록 활용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용 횟수 1~5회가 19편으로 46.3%를 차지한 점은 구술기록 인용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 9〉 에고 도큐먼트 인용 횟수별 논문 분포

인용횟수	해당 논문수	인용횟수	해당 논문수
1~5회	20	31~40회	-
6~10회	7	41~50회	-
11~20회	2	51회 초과	1
21~30회	-	합계	30

에고 도큐먼트 인용 횟수별 논문 분포를 살펴보면(〈표 9〉), 89편의 논문 가운데 33.7%가 1회 이상 인용하였다. 그러나 일기를 인용한 경우는 4편(4.5%)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서전 · 회고록을 이용하였다.[7] 에고 도큐먼트 인용 논문 가운데 66.7%의 논문이 1~5회 인용하였다.

2) 주제별 분석

주제별 기록 인용 횟수는 논문편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 인용 횟수가 많은 주제는 경제 26.63%, 노동 16.18%, 새마을운동 11.69%, 담론 11.25% 등의 순이었다.

7) 『국가와 혁명과 나』(1963), 『민족의 저력』(1971) 등의 박정희 자서전이 다수 인용되었다.

〈표 10〉 주제별 기록 인용 횟수

기록 유형 \ 주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교육	과학	지역	노동	담론	민주화	새마을
정부기록	정부 간행물	3	183		12	22	28			51	55	6	71
	중앙기록		26	4	36	1	4		2	56			
	외교기록	56				32							
	법률기록		16							3			
	지방기록		65	8					4	4			4
	공공기관 기록		2							1			
	소계	59	292	12	48	55	32		6	115	55	6	75
대통령기록			60			53				11	39		26
국회기록			10		13	3	1			8	27		
법원기록												5	
마을 기록													37
선언서·성명서											15	5	
민주화운동 아카이브										1	1		
에고 도큐먼트	일기		107				16						
	수기									97			23
	자서전·회고록	1	9		2	8				2	19	2	5
	소계	1	116		2	8	16			99	19	2	28
구술 기록			17	27		120	3		22	157	4	68	192
외국 기록						133				6	4	2	
기업 기록			53							13			
단체 기록			1				2		268	242	9	111	101
신문	중앙지		606	58	201	16	64	3	11	78	93	68	112
	지방지		1	2									2
	대학신문		2								40	13	
	로동신문					11							
	소계		609	60	201	27	64	3	11	78	133	82	114
연속간행물			151	9	6	3	45	1	6	24	254	10	18
조직·단체사			65		23		5	2	55	79	2	75	13
소설			2							3	19		
합계		60	1,376	108	293	402	168	6	368	836	581	365	604
백분율(%)		1.16	26.63	2.09	5.67	7.78	3.25	0.12	7.12	16.18	11.25	7.06	11.69

기록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기록은 경제 · 노동 · 새마을운동 순으로, 대통령기록은 경제 · 국제 · 담론 · 새마을운동 순으로 많이 인용되었다. 정부기록 · 대통령기록 · 국회기록 · 법원기록 등 아카이브 성격의 기록 인용은 경제 · 노동 · 담론 · 국제 순이었다.

에고 도큐먼트 가운데 일기는 경제 · 교육 주제만 인용하였으며, 수기의 경우 노동 주제에서 주로 활용하였다. 구술기록은 새마을운동 · 노동 · 국제 순으로, 외국기록은 국제 주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각종 단체에서 생산한 단체 기록은 지역 · 노동 · 민주화운동 · 새마을운동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신문기록의 경우 경제 · 문화 · 노동 · 새마을운동 주제 등에서 주로 인용하였다. 연속간행물은 담론 · 경제 주제에서 주로 활용하였다.

기록 인용 횟수가 가장 많은 경제 주제를 사례로 기록 인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의 경우 아카이브 성격의 기록 인용 횟수는 전체 1,376회 가운데 362회로 26.3%를 점했다. 그러나 역사 연구에서 2차 사료로 분류되는 정부간행물 인용 횟수 183회, 대통령연설문집 5회,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생산한 간행물 9회 등을 합하면 그 비율은 54.4%에 이른다.[8] 따라서 이와 같은 2차 사료 성격의 기록을 제외하면, 아카이브 인용 횟수는 12.1%에 그친다.

〈표 11〉 경제 주제 기록 인용 횟수

기록 유형 \ 세부 주제		경제정책	공업	농업	자본	기업	합계
정부기록	정부간행물	중앙 20	중앙 80	중앙 62	중앙 1		183
			지방 3	지방 7			
		공공 7	공공 2		공공 1		
	중앙기록	5	15		6		26
	외교기록						
	법률기록	13	1		2		16
	지방기록		35	30			65
	공공기관 기록				2		2

8) 183회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생산 간행물 인용횟수는 163회, 지방정부 10회, 공공기관 10회 등으로, 중앙정부에서 생산한 간행물을 인용하는 비율은 89.1%에 이른다.

대통령기록		문서 25 영상 1	문서 20 간행물 9 연설문 5				60
국회기록		6		1	3		10
에고	일기			107			107
도큐먼트	자서전·회고록	2	1			6	9
구술 기록			6	6	5		17
기업 기록		9	2		42		53
단체 기록					1		1
신문	중앙지	282	28	82	214		606
	지방지		1				1
	대학신문	2					2
연속간행물		95	13		43		151
조직·단체사		19	3	9	33	1	65
소설		2					2
합계		488	224	304	353	7	1,376

일기 기록은 [농업] 주제에서 농민 생활과 관련하여 주로 인용하였다. 기업 기록은 [자본], 신문 기록은 [경제정책]·[자본] 주제에서 활용했다. 연속간행물은 [자본]·[경제정책] 등에서 인용했다.

경제 주제에 인용된 기록을 살펴보면, 신문기록은 『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연속간행물은 『세대』·『청맥』·『월간중앙』·『신동아』 등을 인용하였다. 아카이브 성격의 기록 가운데 정부기록은 건설부 등의 중앙부처, 경상남도 등의 지방정부 생산기록이 인용되었다. 대통령기록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대통령기록관 소장 기록을 이용하였다. 정부간행물은 경제기획원·과학기술처·국무총리 기획조정실 등에서 생산한 기록 등을 인용하였다. 기업 기록은 『사업보고서-1971년도』(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경제단체 기록이 활용되었으며, 조직·단체사 기록은 『전경련 이십년사』(전국경제인연합회), 『롯데칠성음료 60년사』(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등을 이용하였다. 일기의 경우는 『창평일기』 등을 인용하였다.

3) 기록 이용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기록 인용 실태 분석을 토대로 1970년대 한국현대사 연구에서 이용된 기록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기록 유형을 중심으로 기록을 인용하였다. 곧 역사 연구에서 2차 사료에 속하는 신문기록 · 연속간행물 · 정부간행물 인용 횟수 비율이 45.2%로 매우 높다.

둘째, 반면에 아카이브 성격의 기록을 인용한 비율은 11.2%(정부간행물 제외)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대통령기록 전체 인용 횟수 189회 가운데 연설문집 69회, 간행물 11회를 제외하면, 대통령기록 인용은 109회에 그친다. 곧 아카이브 성격의 기록 인용 비율은 9.7%로 더 낮아진다.

셋째, 역사 연구에서 기록의 객관성 문제가 논란이 되곤 하는 구술기록 · 에고 도큐먼트의 인용 비율도 17.4%에 이른다.

요컨대 신문 · 간행물 등의 인용 비율이 높고, 아카이브 인용 비율이 낮은 것은 현대사 연구에 필요한 기록 부재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술기록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은 한편으로 철저한 사료비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넷째, 공공기록을 인용하는 방법이 연구자 마다 제각각이다. 대통령기록을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외자도입 인가 업무 조정(김용환)」, 1972년 3월 4일, 대통령비서실; 재경; 대통령기록관 EA0000430

사례 2
대통령비서실, 「불량주택지구개발촉진대책(서울시건의)」, 1973.1.24.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EA0006884)

사례 3
대통령비서실, 『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한국과학원 제1호관 마감

공사 경비』, 경제제1, 접수번호 24, 1973년 4월 20일 대통령 결재문서, 1973.4.19.

사례 4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 「제14차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회의보고」, 대통령보고문서, 대통령비서실, 1973.11.8.

사례 5

대통령 비서실(경제 월간 정기보고 보고번호 제342호, 보고자: 박성웅), 「외국인 직접 및 합작투자 사업 현황」, 1970. 4. 8, 대통령기록관 소장 자료

사례 6

「소련의 한국에 대한 태도변화 분석」, EA0003198, 1973.04.12.

위 사례는 모두 대통령기록관 소장 대통령기록을 인용한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관리번호의 사용 여부도 각기 다르다. 인용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이 소장 기록을 인용할 때 어떻게 인용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기록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외국의 아카이브와 마찬가지로 아카이브 인용 방법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 한국현대사 연구를 위한 아카이브의 역할

아카이브가 기록을 선별하여 보존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역사 연구자들에게 기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1970년대 한국현대사 연구는 최근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시기 연구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현대사 연구의 진전을 위한 아카이브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아카이브는 첫째, 기록 이용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범위도 학술지 게재 논문뿐만 아니라 단행본·학위논문 등을 망라하고, 시기도 1945년 해방 이후 현대사 전체로 확대하여 면밀한 기록 이용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사 연구 동향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이와 같은 작업을 토대로 현대사 연구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기록 수집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사 연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부간행물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아카이브 소장 정부간행물의 체계적 조사를 기초로 정부수립 이후 발간된 정부간행물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면, 현대사 연구자들의 아카이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잡지 등 연속간행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카이브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은 연구가치 중심의 기록 평가·선별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의 기능 중심 기록 평가 체계로부터 기능과 주제를 배합한 기록 평가 체계로 발전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한국현대사 연구자를 위시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 재조직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곧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인 재조직 방법이 될 것이다.

다섯째, 신문기록 가운데 특히 중앙지의 이용이 많은 이유는 디지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등이 자주 인용되는 것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의 구축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 기록이 많이 남지 않은 현실에서 지방신문·대학신문 등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아카이브는 신문사·대학들과의 협력을 추동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한계는 한국현대사 연구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아카이

브 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고지수. 2017. 1970년대 초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반유신운동.『사림』, 59, 255-289.

곽건홍. 2014.『한국 국가기록 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역사비평사.

국가기록원. 2016. 2016년 국가기록원 업무계획.

국가기록원. 2017a. 월간 업무계획(2017.7.1.~7.31).

국가기록원. 2017b. 2016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고(안).

기광서. 2015. 박정희 정부의 대중·소 외교정책 - 대통령 기록물 분석을 중심으로.『아세아연구』58-2. 78-105.

김경일. 2010. 한국 산업화 시기 노동자의 생애와 사건 - 기억의 재구성과 노동자 정체성의 형성.『사회와 역사』, 85, 5-52.

김귀옥. 2011. 1960~70년대 비전향 장기수와 감옥의 일상사 - 비전향장기수의 구술 기억을 따라.『역사비평』, 94, 258-297.

김근배. 2017. 박정희 정부 시기 과학기술을 어떻게 볼 것인가? - 과학대통령 담론을 넘어서.『역사비평』, 118, 142-168.

김명배. 2012. 기억과 역사로 본 영등포산업선교회의 노동운동.『숭실사학』, 28, 285-319.

김무용. 2011. 197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운동의 젠더화와 문화투쟁.『역사연구』, 20, 39-94.

김보현. 2011. 박정희시대 지배체제의 통치 전략과 기술 -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90, 49-77.

김선미. 2016. 1970년대 후반 부산지역 학생운동 연구 - 1978년을 중심으로.『지역과 역사』, 39, 343-374.

김소남. 2012. 1970~198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소비자협동조합운동 연구 - 강원도 광산지역 소비조합육성사업을 중심으로.『사학연구』, 108, 343-409.

김소남. 2014. 1970년대 원주그룹의 농촌소비조합운동 연구 - 재해대책 사업위원회의 구판사업을 중심으로.『사학연구』, 114, 201-249.

김소남. 2015. 1970년대 원주그룹의 전답복구사업과 협업농장 사례 연구.『한국근현대사연구』, 72, 311-348.

김소남a. 2011.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원주원성수해 복구사업 연구.『사학연구』, 104, 231-292.

김소남b. 2011. 1970년대 원주지역의 부락개발사업 연구 -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초기 활동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82, 407-454.
김수아. 2015. 1970년대 학교행사 자료를 활용한 현대사 학습.『청람사학』, 24, 277-323.
김아람. 2013. 1970년대 주택정책의 성격과 개발의 유산.『역사문제연구』, 29, 47-84.
김양화. 2011. 이윤율의 동향과 자본축적 : 한국 면방직공업(1951~1976년)의 사례.『한국민족문화』, 39, 262-289.
김연철. 2012. 7·4남북공동성명의 재해석 -데탕트와 유신체제의 관계.『역사비평』, 99, 220-260.
김영미. 2012. 어느 농민의 생활세계와 유신체제.『한국근현대사연구』, 63, 275-306.
김영미. 2016. 어느 독립운동가 마을의 새마을운동.『한국민족운동사연구』, 86, 241-278.
김원. 2015. 1975년 베트남 공관원 억류 사건을 둘러싼 기억들의 재구성.『구술사연구』, 6-1, 45-120.
김지형. 2013. 유신체제기 박정희의 남북관계 구상과 실제.『역사와 현실』, 88, 69-100.
김태호. 2016. 갈채와 망각, 그 뒤란의 '산업 전사'들 -'국제기능경기대회'와 1970~80년대의 기능인력.『역사문제연구』, 36, 103-148.
김행섭. 2015. 1974~75년 동아일보·동아방송 구성원들의 자유언론투쟁.『사림』, 53, 341-391.
노영순. 2014. 부산입항 1975년 베트남난민과 한국사회.『사총』, 81, 329-364.
류제철. 2010. 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여가시간을 둘러싼 투쟁.『사회와 역사』, 85, 53-82.
박길성, 김경필. 2010. 박정희 시대의 국가-기업 관계에 대한 재검토 - 기업의 분석을 중심으로.『아세아연구』, 53-1, 126-154.
박영구. 2010. 1970년대 한국의 석유화학공업계획: 변화과정을 중심으로.『경제사학』, 48, 167-198.
박영구. 2011. 중화학공업화선언과 1973년 공업교육제도 변화.『한국민족문화』, 40, 347-388.
박영구. 2012. 공업화와 교육: 중화학공업화와 기능공 육성.『경제사학』, 52, 117-141.
박영구. 2015. 1970년대 안정공업기지의 사례를 통해 본 한국사회 갈등 구조의 역사적 고찰.『한국민족문화』, 57, 363-394.
박유희. 2012. 박정희 정권기 영화 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학.『역사비평』, 99, 42-90.
박진우. 2010. 박정희정권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지도자 양성,『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279-317.
박태균. 2013. 8·3 조치와 산업합리화 정책 - 유신체제의 경제적 토대 구축과정.『역사와 현실』, 88, 101-144.

방성찬, 이승일. 2017. 1960-70년대 원주지역의 신협운동- 진광 협동교육연구소와 진광 신협의 활동을 중심으로.『역사학연구』, 65, 29-63.
송은영. 2013. 유신체제기 사회적 공간의 위계화와 '동경-원한'의 감정구조.『역사문제연구』, 29, 85-110.
신민정. 2011. 한국 정부의 화전정리사업 전개과정과 화전민의 실태(1965-1979년).『경제사학』, 50, 69-103.
신병현. 2011. 민주노조운동의 전태일 애도와 재현.『역사연구』, 20, 7-38.
신종대. 2012. 유신체제 수립을 보는 북한과 미국의 시각과 대응.『아세아연구』, 55-3, 183-216.
오제연. 2012. 1970년대 대학문화의 형성과 학생운동-'청년문화'와 '민속'을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 28, 77-110.
오유석. 2014. 여성 새마을지도자의 눈으로 남녀 동수의 새마을운동 경험 읽기.『구술사연구』, 5-2, 119-145.
오제연. 2016. 연구의 확장, 새로운 모색, 대화의 부재 - 2014~2015년. 한국 현대사 연구 동향.『역사학보』, 231, 77-113
왕연. 2014. 풍덕마을 새마을운동의 추진주체와 조직기반.『한국근현대사연구』, 69, 168-197.
유경순. 2011. 197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 노동자와 지식인의 연대관계 형성 및 상호 영향.『한국사학보』, 44, 343-379.
유경순. 2013. 1970~1980년대 노동자 저항방식 - 파업투쟁과 점거투쟁을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 29, 323-365.
윤용선. 2014. 1960-70년대 파독 인력송출의 미시사: 동원인가, 선택인가?.『사총』, 81, 422-450.
윤충로. 2011. 구술을 통해 본 1970년대 새마을운동 - 새마을지도자 '만들기'와 '되기' 사이에서.『사회와 역사』, 90, 79-109.
이상록. 2010. 1960~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의 민주주의 담론.『역사와 현실』, 77, 39-71.
이상록. 2013. 1970년대 소비억제정책과 소비문화의 일상정치학.『역사문제연구』, 29, 137-182.
이상록. 2016. '예외상태 상례화'로서의 유신헌법과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역사문제연구』, 35, 511-555.
이상민. 2002. 역사를 위하여: 아키비스트와 역사가의 역할 - 공공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기록학연구』, 6, 225-262.
이은희. 2015. 박정희 시대 콜라전쟁.『역사문제연구』, 34, 87-132.
이정덕 외. 2012-2013.『창평일기』1~4. 서울: 지식과교양.

이정은. 2010. 1970년대 초중반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박정희정부의 대응.『한국사학보』, 38, 249-282.
이정은. 2014. 전경련의 '합리적' 내자 조달방안 요구와 전재 - 1966~1972년을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 32, 459-506.
이정은. 2015. 자본시장 육성과 기업공개 - 1967~1973년 전경련의 추진과 기업의 시행을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 34, 133-177.
이종현. 2012. 1970년대 정부의 반(反)소비 정책과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역사문제연구』, 28, 303-338.
이창섭. 2015. 1972년 박정희 정권의 독농가 육성 정책.『지역과 역사』, 36, 351-393.
이창섭. 2016. 1970년대 농촌새마을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 - 충남 당진군 석문면 삼화2리를 중심으로.『한국민족문화』, 59, 153-192.
이창언. 2012. 유신체제 하 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과 저항의 관계.『역사연구』, 23, 7-42.
이하나. 2012. 유신체제기 '민족문화' 담론의 변화와 갈등.『역사문제연구』, 28, 39-75.
이하나. 2013. 1970년대 감성규율과 문화위계 담론 -'통속'의 정치학과 권위주의 체제.『역사문제연구』, 30, 203-240.
이하나. 2014. 유신체제 성립기 '반공' 논리의 변화와 냉전의 감각.『역사문제연구』, 32, 507-553.
이환병. 2013. 1960년대 모범농민의 농업경영과 1972년 새마을교육.『한국민족운동사연구』, 76, 213-258.
임광순. 2016. 1970년대 노동통제전략의 구축과 붕괴 - 공장새마을운동의 전개와 정부기업 노동자의 대응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102, 323-360.
임송자. 2010a. 전태일 분신과 1970년대 노동·학생운동.『한국민족운동사 연구』, 65, 319-360.
임송자. 2010b. 1970년대 한국노총의 공장새마을운동 전개양상과 특징.『한국근현대사연구』, 52, 181-218.
장미현. 2013. 1970년대 초반 재계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과 그 '결과'-기술도입과 저임금 생산 기반 형성의 '이중주'.『역사문제연구』, 30, 241-274.
장미현. 2016. 산업화 시기 여성 노동자들의 숙련과 '작업장 질서'의 전복.『역사문제연구』, 36, 59-102.
전강수. 2012.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역사문제연구』, 28, 9-38.
전덕재. 2015. 1973년 천마총 발굴과 박정희 정권의 문화재 정책.『역사비평』, 112, 186-205.
정무용. 2013. 1970년대 중·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시행과 '교육격차'.『역사문제연구』, 29, 111-135.

정용욱. 2007.「2006년의 한국현대사 연구 동향」.『역사학보』, 195, 171-193.
정종현. 2014. 노동자의 책읽기 - 1970-80년대 노동(자)문화의 대항적 헤게모니 구축의 독서사.『대동문화연구』, 86, 73-121.
정태헌. 2014. 박정희정권 시기 지식층의 대만 農政 인식과 그 변화.『아세아연구』, 57-3, 7-47.
주윤정. 2013. '사람 취급' 받을 권리 - 1970년대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의 역사.『역사비평』, 103, 92-116.
차성환. 2012. 유신체제와 부마항쟁 - 지배와 저항의 사회심리적 기제를 중심으로.『역사연구』, 23, 43-80.
차철욱. 2016. 1970~80년대 농촌근대화와 로컬시간의 재구성 - '창평일기' 분석을 중심으로.『지방사와 지방문화』, 19-2, 261-289.
최인이. 2011. 근대적 시간관념과 이윤개념의 내면화 - 새마을부녀지도자의 노동활동 경험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90, 111-143.
한도현. 2010.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서 마을 지도자들의 경험세계: 남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88, 267-305.
허은. 2010. 박정희정권하 사회개발 전략과 쟁점.『한국사학보』, 38, 213-248.
허은. 2014. 마산수출자유지역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형성에 관한 연구.『사회와 역사』, 102, 317-356.
허은. 2015a. 박정희 정부시기 농촌사회 재편과 지역 총력안보체제 구축 - 구성면 면정문서 분석을 중심으로.『사총』, 84, 31-75.
허은. 2015b.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총력안보체제 구축과 학교의 역할.『한국사학보』, 60, 425-455.
허종. 2008.「한국현대사의 연구 동향」.『역사학보』, 199, 173-192.
홍석률. 2012. 1971년의 선거와 민주화운동 세력의 대응.『역사비평』, 98, 121-151.
홍석률. 2013. 유신체제와 한미관계.『역사와 현실』, 88, 35-67.
홍석률. 2014. 1970년대 민주화 운동세력의 분단문제 인식 - 분단시대론과 분단체제론.『역사와 현실』, 93, 467-504.
홍석률. 2015. 동일방직 사건과 1970년대 여성노동자, 그리고 지식.『역사비평』, 112, 232-251.
홍성태. 2012. 유신 독재와 주민등록제도.『역사비평』, 99, 91-112.
황병주. 2011.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업 생산과정의 변화와 농민 포섭.『사회와 역사』, 90, 5-48.
황병주. 2012. 1970년대 유신체제의 안보국가 담론.『역사문제연구』, 27, 109-139.
황병주. 2014.「한국 현대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2012~2013)」.『역사학보』, 223, 89-119.
황병주. 2013. 유신체제기 평등 - 불평등의 문제설정과 자유주의.『역사문제연구』, 29, 7-46.